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6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 (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5.

다. 회 부 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

(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목적 - 한국은행법은 효율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u>물가안정 도모</u>를 목적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u>금융안정</u>에 유의 ○ 정부 정책과의 조화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정부의 경제정책</u>과 조화 ○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20가지 - (신 설)	○ 목적 - (현행과 동일)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u>금융 및 고용안정</u>에 유의 ○ 정부 정책과의 조화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u>과 조화 ○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현행과 동일) -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현행법 제1조제1항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주목적을 ‘물가안정’, 보조 목적을 ‘금융안정’으로 규정하고 있음¹⁾.

1)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고려하게 되면 통화정책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도 금융안정을 물가안정보다 하위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실물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로 설정함에 있어서는 목표 간 상충 문제와 경제지표의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목적으로 ‘물가안정’을 규정하면서 보조적 목적으로 ‘금융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안정’의 목표가 추가될 경우 목표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²⁾을 사용하는 경우, 실물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³⁾ 이에 더해 고용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될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실제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표인 고용률 또는 실업률⁴⁾을 기반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여 통화정책을

2) 전통적 통화이론에 따르면 $M(\text{통화량}) \times V(\text{화폐유통속도}) = P(\text{물가}) \times Y(\text{생산량})$ 으로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3) 2024년 8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출처] - 국민일보

결정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일례로 통상 취업자가 줄어 고용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4.5~2024.7)간 청년(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신뢰성 있는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한 통화정책은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통화정책도 고용안정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한국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가 부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재정정책이

4)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로서,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제외되어 실제 취업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구직단념자가 많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산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다른 결과가 발생

수행되는 경우 증가된 유동성이 고용으로 유입되어 고용안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목표에 물가안정 외 고용안정을 규정한 국가는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약 6개국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⁵⁾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양대 책무로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물가안정과 동일한 지위의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고용안정 목적을 다수의 중앙은행 목적 중 하나로 부여하고 있음.

5) 뉴질랜드는 2023년 12월에 인플레이션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완전고용 문구를 삭제함

[주요국 중앙은행의 법적 목적 현황]

국가	물가안정	고용안정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정부정책과의 조화
한국	●		○	△	△
미국	●	◎	□		
ECB	●				△
영국	●		○		○
독일	●		□	○	△
이탈리아	●				△
프랑스	●				○
스웨덴	●		○	○	○
노르웨이	●	○	○	○	
덴마크	●		○		
캐나다	●	○	○		△
호주	●	○	○	○	
뉴질랜드	●		○		
일본	●		○	○	△
아르헨티나	●	○	○	△	△
튀르키예	●				△
인도	●		○		△ ¹⁾
중국	●		○		
러시아	●		○	○	△
남아공	●		○		
멕시코	●		○	○	△
사우디	●		○		
인도네시아	●		○	○	△
브라질	●	○	○		△

1) 중앙은행에 대해 정부가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목적(물가안정, 통화가치 안정 등)

◎ : 양대 책무로 부여

○ : 다수 목적 중 일부로 포함

△ : 목적 조향이 아닌 의무·기능 조향

□ : 타법상 의무·기능 부여

자료 : 기획재정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① (생략)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u>금융안정</u> 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금융 및 고용</u> <u>의 안정</u> -----.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정부</u> 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 ----- -----「 <u>고용정책 기본법</u> 」에 따른 <u>고용정책</u> (이하 “ <u>고용정책</u> ” 이라 한다) 등 <u>정부</u> ----- -----.
② (생략)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9. (생략) <u><신설></u> 20.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 -----. 1. ~ 19. (현행과 같음) 20. <u>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u>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문의처

02)6788-5148